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이 11월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됩니다.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이 좌절되자 2024년 1월 27일로 명시된 <50인(억)미만 적용 연기> 원 포인트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총선을 앞둔 11월-12월 국회에서 정치적 거래에 나섰습니다.

2.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숨까지 차별받을 일은 아닙니다.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법령은 국내도, 외국에도 없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 받지 않게... 경영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연장하면 <재해 발생 이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시정 권고 이행, 법령 준수 및 안전교육> 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도 적용 제외 됩니다.

○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합니다. 적용 연기는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로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빼돌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완성 시키게 됩니다.

3. 법 제정에 나섰던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개악을 저지하고 무력화를 파탄 냅시다.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법 제정 요구, 피해자 유족과 국회 안팎의 단식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50인 미만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 추진 이제 다시 10만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50인(억) 적용 연기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한 중단하라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썩게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이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연번	소속	이름	주소(읍, 면, 동까지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